

“춘천~홍천 국도 4차선 확장 절실”

춘천상의 정부에 건의문

춘천상공회의소(회장:김대호)가 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 조기 완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에 7일 보냈다.

춘천상의는 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 조기 완공 촉구 건의문에서 “춘천~홍천 간 국도 5호선은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타당성이 인정됐다”며 “이 구간의 조기 확장을 지역 주민과 상공인들이 함께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춘천과 홍천은 동일생활권으로 출퇴근 차량의 왕래가 많은데 현도 1차선인 춘천~홍천 도로는 굴곡과 경사가

심하고 특히 응달진 곳이 많아 동절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8년이 지난 지금도 4차 5개년 계획 후보 노선으로 있어 지역 주민들의 기다림과 실망감을 커져가고 있다”며 “국도 5호선 192km 중 춘천~홍천 21.5km만 2차로로 남아 있다”고 했다.

춘천상의는 이어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춘천과 홍천을 찾는 차량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도로인 춘천~홍천 국도의 4차선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홍기자 pjh@kwnews.co.kr

국도5호선 확포장 조기완공 건의

<춘천-홍천>

춘천상공회의소
국회 건의문 전달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호)가 지역의 숙원사업인 춘천~홍천 국도 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의 조기완공을 건의하고 나섰다.

춘천상의는 7일 국회 등에 도

내 국도 5호선 192km 중 2차선으로 남아있는 춘천~홍천 21.5km 구간에 대한 확포장 공사 조기완공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다.

춘천상의는 건의문에서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으로 춘천과 홍천을 찾는 차량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량 분산을 위한 대체도로인 춘천~홍천 국도의 4차선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천~원주 구간의 확포장이 완료된 2000년 이후 14년만에 춘천~홍천 구간 실시설계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며 “추가 예산은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완공시기에 대한 춘천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도 5호선은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를 비롯한 춘천 동남권 개발과 나아가 강원도의 상생발전을 이끌어갈 중요한 기반도로이기 때문에 확포장 조기완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춘천~홍천 국도 5호선은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후 지난해 12월 4차로 확포장 사업 실시설계 예산 5억원이 반영됐다.

춘천/김호석 kimhs88@kado.net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 등

부실·불법업체 대대적 실태조사

건설업 등록증을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빌려주고 부당이득을 챙긴 건설업체를 색출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급한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부실·불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다음달부터 본격화된다.

국토부, 다음달부터 단속
발주처 역량 강화도 강조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사·공단, 지자체 등 전국 340여개 공공 발주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발주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발주자의 권한 강화에 발맞춰 올바른 발주자의 역할을 논의하고 국토부의 건설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6월부터 실시되는 부실·불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발주기관들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실태조사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조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조사 △불공정 하도급 적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조사 등 크게 4개 부분으로 진행된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의 경우 조사대상업체가 6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착공정보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공사 현황을 교차점검해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이들의 최근 3년간 착공신고 건수(세움터)는 건설업체가 보유한 기술자(KISCON)의 3배 이상이다.

김태형기자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 등 부실·불법업체 대대적 실태조사

실제 지난 2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등록증 불법대여업체 43개사를 국토부가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영업기간은 20개월, 4년간(2011~2014년) 업체당 평균 착공건수는 143건(최대 923건), 업체 보유 기술자 대비 평균 착공건수는 약 33배(최대 156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및 시스템 정비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조사대상을 선정해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를 통해 6월 한달간 서면조사를 벌인 후 7~8월 현장조사를 거쳐 9월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와 별개로 오는 10월부터는 건축법 시행규칙을 고쳐 착공 신고서 제출 시 건설현장 배치기술자 기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세움터와 키스콘을 분기별로 교차 점검해 등록증 대여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실태

태조사도 다음달 착수한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조기경보시스템 조사 시 재무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5467개사 중 올해 주기적 신고대상(2290개사) 등을 제외한 2700여곳이다. 일정은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조사와 같다.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해선 6개월 내외의 영업정지나 등록 말소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올해 처음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적발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기계업자의 대금 체불이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미지급 현장에 대한 처벌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대한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적발업체에는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1개월(또는 과징금 2000만원)과 함께 보증서 발급 또는 발주자의 직불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강원도, 올 추경 3208억원 편성

강원도가 올해 3208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7일 강원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3208억원으로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서민경제 살리기 519억원, 동계올림픽 준비 461억원, 복지재정 266억원, 부채상환 140억원 등이다.

3208억원은 지난해 1회 추경 규모보다 1385억원 늘어난 것으로, 이번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 예산은 총 4

조8797억원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133억원, 올림픽 특구사업에 98억원, 개·폐회식장 및 올림픽플라자 건설에 108억원이 투자된다. 또한 지방도 확·포장비도 이번 추경에서 300억원 늘어나 총 75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청년 일자리 사업 및 청년 일자리 보조금 33억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50억원, 공항 활성화 42억원, 이전기업 지원 43억원 등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정희훈기자

건설 전문가 상담코너

Q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A사는 동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비임대업자인 B사와, B사로부터 기중기를 임차하여 사용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A사에 위 기중기를 B사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임대하였고 그 운전기사로 하여금 기중기를 운전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위 운전기사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무게를 초과한 쇄석기를 인양하다가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된 경우 A사가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부담하는지 문제됩니다.

A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중기의 인양가능 무게의 선택이나 운전이 고도의 전문적 기술을 요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바, 판례는 그 경우 임차인의 기중기 운전기사에 대한 지휘, 감독은 임차한 기중기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제한적으로 부여받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나332 판결).

따라서 기중기를 운전기사와 함께 임차하여 임대인의 피용자인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중기의 운전과 관련한 작업방법의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기중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주의 의무는 기중기를 직접 운전한 운전기사가나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관하여 소속 운전기사를 1차적, 직접

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임대인이 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기사가 이러한 주의 의무를 임차인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의하여 위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운전기사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습니다(대구고등법원 판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에 만약 운전기사가 기중기의 제원표에 기재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허용무게를 초과한 대상물을 들어올리다가 하중을 견디지 못한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되었다면 위 판례의 법리에 의할 때, 기중기에 대한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어 운전기사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임차인 측보다는, 기중기 임대업에 종사하면서 운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소속 운전기사를 포함하여 기중기를 임대한 임대인이 1차적 직접적 지휘·감독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사고가 운전기사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무게 선택 및 적정 지점거리와 붐대길이 선택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 회사 측에 기중기의 파손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변호사
건협 법률상담 자문위원



제공 : 대한건설협회·상담신청 : 02-3485-8305, www.cak.or.kr

건협 시·도회 정기총회

서울시회장에 박종웅 현 회장연임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24대 회장으로 박종웅 현 회장이 재선임됐다. 감사는 부회장으로 활동해 온 이대성 임원개발 대표가 맡기로 했다.

서울시회는 7일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201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고 24대 차기 회장에 추대후보자로 단독 추천된 박종웅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부회장과 운영위원, 대의원 등의 선출은 박 회장에 위임해 선인한 후 그 결과를 <건설경제>에 발표하기로 의결했다.

박 회장은 당선 인사에서 “재선임을 받아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종합건설업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대응과 종합심사제 정착,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근절, 발주기관 불공정 행위 개선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들과 뜻을 합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경기도회장에 허용환 석진건설 대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7일 대표회원 114명 중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개최했다.

도회는 이날 2014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의임여금 처분, 도회장 선출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회 임원 임기가 오는 6월25일로 만료하면서 차기 임원을 선출하게 됐으며, 제22대 도회장으로 단독출마한 허용환 석진건설대표이사 대표회원의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하 대표는 종합건설 업역 보호 및 확대를 위해 △불법 건설업 등록대여 행위 근절 추진 △타업종의 종합시장 진출 적극 대처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합리적 개선 통한 공정거래 추진 등을 공약했다.

신임 감사는 황근순 이엠종합건설 대표가 선출됐다. 차기 임원 선출건에 대해서는 신임 회장에게 위임기로 했다.

신임 회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2015년 6월26일~2018년 6월25일)이다.

경북도회장에 배인호 성호건설 대표



제23대 건협경북도회장에 배인호 성호건설 대표이사 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회장 이종연)는 7일 대구시 산격2동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배인호 신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배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적정공사비 확보와 지역 수주물량 확충을 위해, 또한 협회와 회원사의 어려움을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도회는 또 이종연 현 회장을 이

날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임 감사로 사공덕 태령종합건설 대표 이사를 선출했다.

이 박의 신임 임원 선출은 새 회장에 위임했다.

한편 이종연 회장은 이날 긴급 제안에 나서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추진에 강력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 문제에는 지역 중소기업사의 생존권이 걸려 있다며 규탄집회에 적극 참여해 부담성을 알리고 입법예고 철회를 관철하자고 덧붙였다.